“부동산 투기수익 908억 몰수 · 추징 보전조치”

김부겸 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 · 수사 중간결과 발표

“경찰청 합수본 20명 구속, 검찰 별도수사로 14명 구속
국세청, 세금탈루 94건 관련 534억원 세금 추징 예정
불법대출 의심 4개 금융회사… 43건, 67명 수사 의뢰”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 수사 중간 결과를 전하고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정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 관련해 총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총 34명을 구속하고 투기수익 총 908여억을 몰수 · 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브로커 등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투기수익으로는 651억원 상당을 몰수 ·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송치사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업자 7명과 및 투기사범 7명 등 총 14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몰수 · 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약 257억원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에 67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날 발표장에는 김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전직 차관급 기관장’은 내부정보로 세종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사경찰은 지난 4월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적발 사항과 관련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또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 · 감독 말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간 진행상황”이라며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공군 남성 하사, 여군 숙소 침입 신체 · 속옷 불법촬영

공군 남성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신체와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2일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는 하사, 피해자의 계급은 다양하다”며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정리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두려움에 떠는 여군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조국 전 장관 “민주당은 날 잊고 개혁에 매진해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사과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대표의 사과 메시지 일부를 게시하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이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민주당은) 저를 밟고 전진하시라.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私人)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국민소통 ·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뉴시스

“균형발전 강화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 환영”

민주 김수흥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해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하며, 전북권 의원으로는 최초로 지난달 24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전북도민의 뜻을 전하는 한편, 관련 정부부처의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예타제도의 문제점,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호소해왔다.

이런 김 의원의 노력 결과,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즉,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낙후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표가 반영되도록 현행 8개에서 36개 지표로 대폭 확대해 전국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167개)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권이 추진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김 의원이 매일 1인 시위를 벌이며 촉구 중인 전북권 철도망 사업의 추가 반영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전북처럼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 및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훨씬 유리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무기한 1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반드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산업부 뿌리산업특화단지 공모에 익산 · 완주 선정

총사업비 16억2000만원 투자

전북도는 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2개 뿌리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도는 익산-U 주얼리 특화단지에 8억7,000만원,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7억5,000원 등 총사업비 16억2,000만원을 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뿌리기업의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34개 뿌리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추진,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근로환경을 증진시키는 편의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 활동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4개의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 ·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내 뿌리특화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등 지역특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뿌리특화단지는 각각 금형과 귀금속 관련 동일 업종 뿌리기업들이 밀집돼 공동 R&D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단지 내 공동활동 수행의 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지난 2018년(3개년)공모 선정에 이어 연속 선정돼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사업’을 심화 추진한다.

금형 공동브랜드(JB MOLD & DIE)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과 수출 일감 나누기를 통해 참여기업의 수출액 증가, 신규 수출기업 육성 등 내수중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춘 수출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어, ‘익산-U 주얼리 특화단지’는 지난 2018년 뿌리단지 지정 이후 첫 공모선정으로, ‘귀금속 표면처리 기술 고도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작업자의 현장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제작 방식에서 탈피, 표준화된 시험기술 확보 및 품질관리를 통해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뿌리특화단지의 인프라 향상 및 친환경 · 디지털화,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 자원과 뿌리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 지원해 뿌리단지별 특성을 살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지 내 뿌리기업이 단계별 성장할 수 있는 뿌리특화단지의 기반을 공고히 해 뿌리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